「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결과보고서」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공론화 이슈

2020. 10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목 차

Ⅰ. 공론화 추진단 추진배경 및 경과

1. 공론화 취지와 배경 ····· 3
2. 공론화 추진단 운영 경과 ····· 10

Ⅱ.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공론화 이슈

1. 협치를 위한 상설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5
2. 담론과 인식 확산을 통한 법·제도 개선 ····· 19
3. 정책 지원체계 개편과 다각화 ····· 27
4. 지역 현장 중심의 생태계 활성화 ····· 38
5. 인력 현장 활동 지원 기반 체계화 ····· 45
6. R&D 강화 및 정보화 고도화 ····· 53

참고문헌 ····· 58

부록 ····· 59

Ⅰ.
공론화 추진단
추진배경 및 경과

1. 공론화 취지와 배경

1. 문화예술교육의 공론화 추진 취지

○ 문화예술교육 정책 15년 이후, 최근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정책 및 사회환경의 변화가 대두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18.1월)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략계획(2018~2022)’(‘18.9월) 발표를 통해 중장기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성 제시
- 교육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계획’ 발표(‘18.11월), 「학교예술교육 진흥법안」 발의(박경미 의원) 등 학교 예술교육 정책 강화 기조
- 예술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일자리사업 제외 등 요구 확대
- 전 생애 교육, 지역생태계, 기술혁명 등에 따른 교육방식 다각화 및 교육의 질 제고 요구 등

○ 이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현장 전문가·학계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및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 배경

1) 문재인 정부 국가 문화정책의 기조에 따른 변화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문화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이하 <문화비전2030>)보고서를 발간(‘18.12월). 보고서는 3대 가치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 3대 방향으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으로 설정하고, 이를 문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9대 의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Ⅰ-1] <문화비전2030> 3대 가치, 3대 방향, 9대 의제 내용

3대 가치	3대 방향	9대 의제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 보장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성 평등 문화의 실현
다양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창의성	사회의 창의성 확산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 <문화비전2030>의 9대 의제 중에서 제1 의제인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에 개인의 문화권리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교육 지역 분권화 추진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 학교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가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해 문화예술교육 안정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영역의 다변화
· 예술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생활 속 자생적 인문 확산 기반 구축

○ <문화비전2030>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새 예술정책(2018~2022):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발표하였음. 이 보고서 전략과제 5번은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며, 이 전략의 실행 과제 1번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 향유 역량강화”임. 대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대표사업 1: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 대표사업 2: 수요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대표사업 3: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 대표사업 4: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및 활성화
· 대표사업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이상과 같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문화정책의 내용들을 검토해본 결과 개인의 문화적 향유를 높이는 대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론화의 주요 방향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실행을 위한 공론화

○ 문체부는 ‘18.1월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이하 ‘<종합계획>’)을 발표. 본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행하는 계획으로서 ‘18~‘22년까지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만들어졌음

○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한계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 미흡’, ‘공급자·중앙 주도적 정책의 한계’, ‘문화예술교육의 수요파악 미흡 및 질적 관리 부족’,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지원환경 필요’, ‘ 전 국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표 I-2]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향

문화예술교육 정책 한계	개선방향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 미흡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문화 예술교육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공급자·중앙 주도적 정책의 한계	공급자 관점을 탈피하여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전환
문화예술교육의 수요파악 미흡 및 질적 관리 부족	교육 내용·방법·형태의 다각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교육기반 조성으로 문화예술교육 질적 내실화 도모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분권 및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지원환경 필요	문화예술교육 참여주체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 환경 개선
전 국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

○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사회영역에서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검토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기반을 확고히 하는 비전에 대한 정책과제 도출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공론화는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성과 및 평가, 향후 발전 방향들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3)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2018)을 발표하였는데, '16년부터 수립 및 추진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예술교육을 보편적 교육, 포괄적 공교육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음

-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은 예술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술교육을 위한 학교 내 자원과 협력구조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계획과 내용, 학교 예술강사와 관련한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음

○ '18.1월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같은 해 11월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은 세부과제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실행단계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함

- 양 부처 계획은 교육콘텐츠 개발, 예술강사·교원 역량 및 협력 강화,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지도 제작 등 세부과제에 있어 유사성을 보임
- 다만, 교육과정 개편, 교육청 지원 등 업무체계 관련 사항 및 예술중점학교 등 영재교육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계획>과 차별성을 보임

○ 이러한 양 부처의 개별적이고 병렬적 계획 수립 및 추진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개념, 국가 정책으로서의 방향 설정에 있어 현재의 난맥상을 보여줌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동일한 정책 대상에 대해 두 개의 비전과 전략, 정책을 각각의 부처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자기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본질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결국 학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구조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 부처 중심의 탑다운 방식의 정책과 사업 구조에서 정책현장과 시민에 기반 한 아래로 부터의 통합적 정책 환경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정책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표 I-3]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중장기계획 비교

구분	교육부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수립일	`18년 11월	`18년 1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비전	예술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시민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학교-지역협력을 통한 모든 학생들의 예술체험 생활화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세부추진과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원과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 예술수업 질적 제고를 위한 학습자료 및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 - 교원 대상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시·도 교육청 정책연수회 및 학교예술교육 중앙지원단 등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랩(Lab) 구축 지원(R&D) - 미디어 교육, 장르통합 교육, 과학기술 융합 교육 등 신규 교육 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경력개발 및 역량 강화 - 교육대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연수 제공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 1학생 1예술활동 및 악기교육지원 등 활성화 - 예술심화교육 및 예술영재 관리 지원 - 문화소외계층 학생 대상 예술교육 지원	- 문화소외지역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방학캠프, 학교 밖 교육, 고3수험생 교육 등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치유교육 운영
	예술활동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조성	
	- 학교-지역사회 협력모델 시범운영 및 지역 예술교육자원지도 내실화 - 교사와 학교 예술강사의 협업체계 구축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지역별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및 학교-사회 연계 모델 구축 -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자원 지도 제작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 학교예술교육진흥법 제정 - 교육청의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정비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 공조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간 협력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은 교육부 중장기계획 관련 사항만 발췌하여 재배치

4) 공론화를 위한 사회문화 환경 분석

4.1 주52시간과 여가문화의 확대

○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마추어 예술동호회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의 증대에 따라 단순히 배우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체험(경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4.2. 고령화 시대 생애주기별 문화향유의 확대

○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지칭. '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0%에 이르며, '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3%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추정됨

○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며, 노령인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을 통해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유아기에서 아동, 청소년, 성년, 장년기에 따른 맞춤형으로 전 생애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함

4.3. 지역화 시대와 문화 분권의 실현

○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사회 경제인프라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화의 정책과제는 시대적 필수 과제임.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 집적화와 도시화, 초고령화 등으로 문화 접근성이 제약된 환경을 개선해 문화가 있는 삶의 보장과 더불어 중앙 중심이 아니라 구석구석의 문화로, 각 지역의 지리적 인문적 특성이 발현되는 국가 문화정책을 요구

○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의 지역적 삶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문화"라고 정의함.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은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 지역문화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관점, 역사적 관점, 생활양식의 관점, 글로벌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문화분권 정책이 실질적 문화자치로 가려면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이 과정에서 문화 행정 혁신과 전달체계 전환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며, 문화자원의 구성에서부터 규모와 배분, 활용 방식에 관해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인 문화 분권의 수준에 맞게 권한이 이동해야 함

○ 문화분권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이 각 지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프로그램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지역의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기반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함

4.4.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성의 가치 확산

○ '16년 '세계 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시대를 일컫는 용어가 되었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적 변화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시점. 통섭적인 환경이 가져올 감각의 지평을 고려한 미래 연구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교육 핵심방향에 대한 담론화 뿐만 아니라, 융합예술에 근거한 예술교육의 목표와 방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함. 예술과 기술, 장르와 장르, 예술과 사회가 융합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이 사회 안에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함

4.5.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상적 삶의 변화

○ 코로나19 사태는 전지구적 재난에 해당되는 전염병이자, 사회질병으로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큰 변화를 야기함. 도시 봉쇄, 자가 격리, 외출금지, 대인관계 금지,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스포츠 행사 취소 등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크게 변화시켰고, 문화예술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문화예술계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종 공연행사들의 취소와 연기, 무관객 온라인 중계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음. 코로나19사태가 문화예술의 창작, 소비, 유통,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함. 현재의 사태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적 삶이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며, 문화예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담론화가

필요함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주요 실천과제는 무엇인지 준비가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에서 자연, 생태, 공존, 상생 등의 주제교육과 성찰, 명상 등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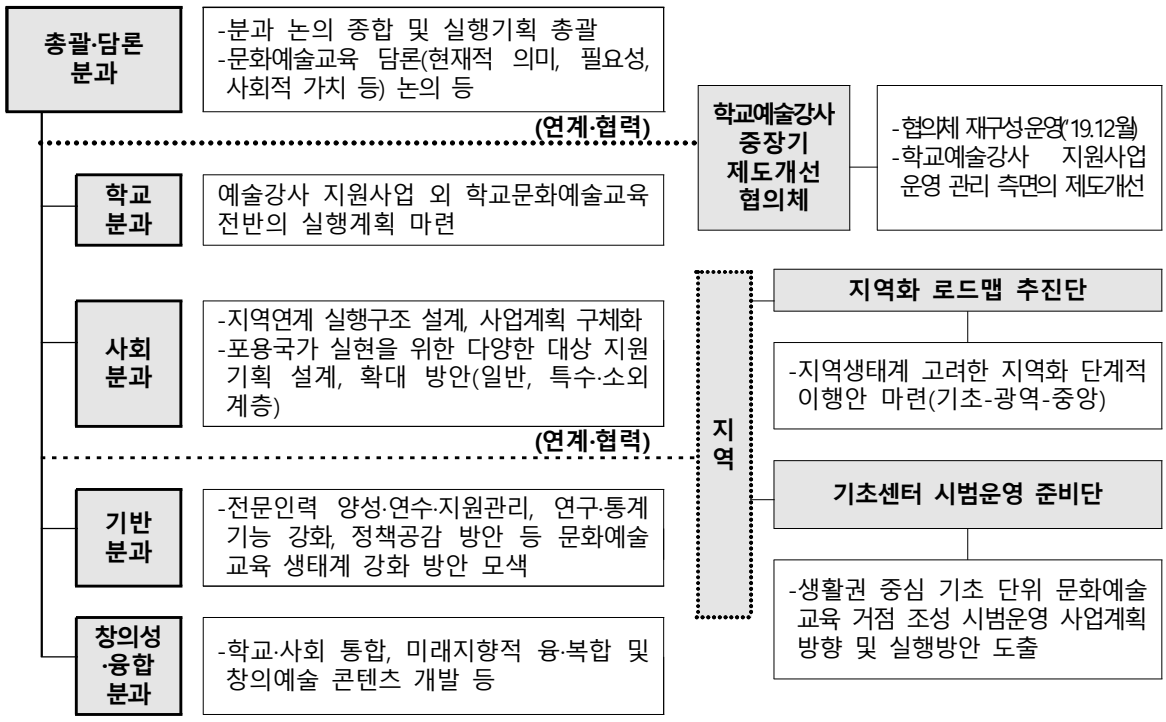
2. 공론화 추진단 운영 경과

1.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운영 배경 및 경과

1) 추진단 운영 현황

○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영역별 5개 분과(총괄・담론, 학교, 사회, 기반, 창의성・융합)로 구성, 현장・학계 전문가 및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 총 30인 참여하되, 단장과 각 분과장으로 구성된 총괄분과를 두어 분과별 논의내용을 종합 토의・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함

[표 I-4]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구성 체계



※ 기 구성·발족된 '학교예술강사 중장기 제도개선 협의체' 및 지역 관련 '지역화 로드맵 추진단', '기초센터 준비단'과 연계·협력 운영

2) 추진단 운영 경과

○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에서는 총 5개 분과별 정기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선행 연구 및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핵심이슈 발굴을 위한 현장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분과별 이슈보고서 작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음

- 분과회의(36회), 분과 통합 워크숍(1회), 분과별 공론화(8회), 종합 토론회(1회) 등 총 46회 회의 추진

[표 I-5]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역할 및 운영방식

구분	주요내용
추진단 구성	· 총 5개 분과(총괄, 학교, 사회, 기반, 창의성·융합)
선행 연구 및 자료 분석	· 정책·학술 연구보고서, 정책 현황자료 등 분석 - 문화예술교육 정책 흐름 및 현안 분석(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기반(전문인력 양성, 연구·조사 등), 콘텐츠 개발 등
정기회의 운영	· 격주 1회 정기회의 운영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인터뷰 개최
현장소통·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행	· 현장 이해관계자,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추진 - 분과별 1회 내외(총 8회), 전체 종합 의견수렴 추진(총 1회)
이슈보고서 작성	· 분과별 공론화 실행 결과를 토대로, 이슈보고서 작성

[표 I-6]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역할 및 운영방식

구분	총괄·담론분과	학교분과	사회분과	기반분과	창의성융합분과	합계
분과회의	9회	7회	6회	6회	8회	36회
분과 통합워크숍	1회					1회
분과별 공론화	1회	1회	4회	1회	1회	8회
종합 토론회	1회					1회
합계	**12회***	**8회**	**10회**	**7회**	**9회**	**46회**

* 분과통합워크숍(1회), 종합 토론회(1회)의 경우 총괄분과 합계로 합산

○ 분과별 집중논의를 통해 주요 정책현안과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공론화 논의단계를 위한 의제 발굴

- (기간) '19. 10월 ~ '20. 5월 / 약 8개월
- (내용) 분과별 정기회의 운영(5개 분과, 총 36회) 및 핵심의제(안) 도출
- (분과별 논의내용)

분과	추진내용
총괄·담론분과 (9회)	ㅇ 공론화 추진단 운영방향, 분과별 논의사항 종합 검토 ㅇ 미래문화예술교육 가치와 정책적 역할, 정책지향 논의
학교분과 (7회)	ㅇ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당면문제, 환경변화, 국내외 사례 검토 ㅇ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방안 논의(융복합·지역연계 등)
사회분과 (6회)	ㅇ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검토, 주요 현안 및 환경변화 분석 ㅇ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체성, 접근성, 관계성, 차별성, 지속성 관련 정책-현장 검토
기반분과 (6회)	ㅇ 문화예술교육 기반정책 현황, 주요 현안 및 환경변화 분석 ㅇ 핵심영역 정리(인적자원·R&D연구·법제도) 및 정책 진흥기반 영역 이슈 검토
창의성·융합분과 (8회)	ㅇ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황 및 사례 검토 ㅇ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범주, 지향점 논의 및 프로그램(안) 마련

○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분과통합 워크숍을 통해 분과별 추진현황 공유 및 추진단 위원 간 의견 교류 등 추진단 운영 중간점검 및 네트워킹의 장 마련

- (기간) '19. 11. 29.(금) 13:00 ~ 18:00 (총 1회)
- (대상) 총 46명 (추진단 분과위원 15명, 문체부 8명, 진흥원 등 23명)
- (내용)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분과별 추진현황 공유 및 관련 논의

○ 분과별 핵심 의제(안)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 장 개최

- (기간) '20. 1. 14.(화) ~ 1. 22.(수) / 서울 등 (총 8회)
- (대상) 공론화 추진단 위원, 현장·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일반 참여자 등 총 222명
- (방식)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공개 토론회 등
- (내용)
  - (총괄·담론) 미래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및 주요 이슈
  - (학교) 지역 연계 및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 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다각화 방안
  - (사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 정책 지원구조 개편 방안
  - (기반) 지역분권에 따른 향후 문화예술교육 인적·R&D 기반 정책 방향
  - (창의성·융합)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 논의
- (분과별 세부 추진내용)

연번	분과	행사명	일자/장소	참석
1	**총괄·담론 분과**(1회)	문화예술교육 담론 및 의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20.1.15.(수), LW컨벤션센터(서울)	34명
2	**학교분과** (1회)	학교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20.1.14.(화), 바비엥2교육센터(서울)	32명
3	**사회분과** (4회)	사회문화예술교육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20.1.16.(목), LW컨벤션센터(서울)	61명
4			`20.1.17.(금), 스파크플로우(대전)	
5			`20.1.20.(월), 부산역KTX회의실(부산)	
6			`20.1.21.(화),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7	**기반분과** (1회)	문화예술교육 기반 정책 (인적자원, R&D영역)의 의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20.1.22.(수), LW컨벤션센터(서울)	37명
8	**창의성·융합분과** (1회)	창의·융합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21.(화), 바비엥2교육센터(서울)	58명

○ 분과별 종합 논의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 장 개최

- (기간) '20. 5. 29.(금) 13:30 ~ 15:00
- (대상) 공론화 추진단 위원, 현장·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일반 참여자 등(약 180명 실시간 시청·참여)
- (방식) 온라인 토론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
- (행사명)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특별 대담
-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추진단 분과별 이슈 논의 등

II.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공론화 이슈

1. 협치를 위한 상설 거버넌스 체계 구축

1.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지속 필요성과 추진 방향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공통된 인식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모든 논의의 근간이 됨

-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에 대한 기능적 교육이 아니며, 창의적 시민주체 형성을 통해 삶의 구조를 바꾸고 질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는 공통의 인식이 존재함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지는 현장과 주체, 실행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서는 여전히 부처, 정책-현장, 중앙-지역 간의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복잡한 실행체계를 개선하고 전환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정책단위에서의 합의 혹은 개념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지난 15여년 간 문화예술교육의 추진과정에서 형성된 최소한의 가치, 관점, 전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18년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면서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같은 해에 발표된 <문화비전 2030>도 '사람이 있는 문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개인의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정부에서 제시한 자치분권과 포용국가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공론화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공론화가 매우 중요함

-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사회영역에서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검토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기반을 확고히 하는 비전에 대한 정책과제 도출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공론화는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성과 및 평가, 향후 발전 방향들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 그간 문화예술교육 공론화는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한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역단위에서의 공론은 활성화되지 못함

- 광역 단위에서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포럼, 토론회 등이 열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매년 대규모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리가 활발한 공론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 영역, 세부사업 단위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보기 앞서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함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인력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초 지역단위가 공론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 단위로 자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사업을 통해 담론을 확산하고 다양한 의제를 발굴할 필요 있음

- 기초 수준의 민-관 협력 공론화 사업 형태로 지원하되, 지원방식은 기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을 확장하거나(예: 지역 순회 학교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혹은 지역 공론화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예: 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 원탁회의) 고려
- 민-관 협력 공론화 사업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정보 공유, 소통, 의제 발굴, 담론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되, 사업 자체의 공개화, 공론화,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교의 관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공론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 마련 필요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소외계층 중심의 병렬적 사업구조로 고착되어 있고, 중앙이 주도하는 공급자(단체, 강사) 중심의 사업 지원으로 지역 고유성과 자율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에 봉착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다뤄야 할 이슈를 현장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함

- 15여 년 전과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펼쳐지고 있고, 생활문화나 인문교육,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정책 영역에 대한 공론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장성과 지속성, 파급성을 고려한 사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론화도 중요함.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구조로의 전환, 생활권 단위 일반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의 현장 주체의 활동을 지속·심화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 방안 등이 핵심적 공론화 이슈로 볼 수 있음

○ 향후 협치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토대를 함께 구축해가는 것이며, 이를 위한 지원과 협력의 과정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임. 이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지원영역이 교육사업 자체였다면, 이제는

지역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국면임.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의 기반구축 정책 추진계획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 건강하고 다양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주체를 발굴 및 양성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작동할 필요가 있음
- 준비된 주체의 조사, 도표화(Mapping), 교류 활동 지원, 잠재적 주체 발굴과 성장 지원, 외부주체의 초대와 지역 밀착 혹은 특성화 기반 협력 프로젝트 추진, 이러한 새로운 지원을 기획하고 촉진하고 지지하고 점검하는 지역사회 공론장과 협력적 실행 체계 마련과 운영이 중요함
- '19년 10월부터 '20년 5월까지 약 8개월 간 운영한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을 시작으로 지난 15년의 문화예술교육 성과와 과제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은 지역과 현장이 중심이 되는 구체적인 공론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러한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함께 구체화할 때 문화예술교육 지역기반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것임

2. 문화예술교육 협치를 위한 다양한 협의기구 연계·협력 및 기능 강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관련 협의에 대한 공식적 권한을 가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체부 주관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교사, 부처(문체부,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학부모 등 다양한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참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문화예술교육 협의기구 비교

구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8조	■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9조
임기	■ 2년	■ 2년
구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 -부위원장: 문체부·교육부 국장급 공무원(각 부처 장관이 지명)	■ 위원장 포함 20명 -위원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부위원장: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개최 규정	■ 연 2회 이상	■ 규정 없음
심의안건	■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 관련 사항 ■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

○ 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상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현재 당연직 2명(문체부 예술정책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을 포함한 15인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문위원회 형태의 문체부 소관위원회로 지난 1년간 2회의 본회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중장기 정책의 심의 등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
- 행정위원회로의 성격 상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론장의 형성, 사회적 합의 구조의 마련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협의회는 광역단위 지자체에서 일부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단순 자문기구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14개 광역단위 지자체(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서 구성하여 운영 중임
- 각 지자체별 위원은 최소 10인, 최대 18인으로 평균 15인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됨

○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협치를 위해서는 현 위원회와 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역할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문화비전 2030>에서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과제로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관계부터 민간에 이르는 협치 모델 재정립이 제시되었으며,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재편은 문화협치에 기반 한 새로운 협력적 구조를 필요로 함
- 위원회와 협의회에 정부와 민간, 학계와 현장 전문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중앙 및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협의・조정・심의가 필요한 안건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혹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

○ 운영주체와 단위에 따른 다양한 협의기구 간 상호 연계 및 교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 있음

- 문체부 주체의 중앙단위 협의기구인 위원회와 시・도(광역)단위 협의기구인 협의회 간 연계를 통해 지역단위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상위단위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 마련
- 문체부-교육부(중앙),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지역) 공동 사업계획 수립 또는 협의체계 마련

2. 담론과 인식 확산을 통한 법·제도 개선

1. 문화예술교육 법적 정의의 한계와 정체성 이슈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으로 본격화 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15년동안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태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과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 과정을 전개해가는 방식의 공론화가 필요함

- 현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개념은 소재와 영역만 다루고 있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1]으로 세분된 정의만 존재함
- 정책 사업의 양적 팽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성 및 가치에 대한 논의 및 담론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질적 표류' 현상이 나타남. 현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철학과 가치(지향성)를 담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재정의 필요

○ 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는 모호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은 초기부터 끊임없이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이분법적 구분 또는 단계적 전환의 이슈에 놓여 있었고, 정책 사업의 행정과 현장에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차이와 그 실천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최소한의 문화예술교육 정체성을 철학적으로 정의하고 각 지역과 현장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가치, 태도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즉, 예술적 체험(경험)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감각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해가는 교육과정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정도의 정의를 최소한의 공통된 인식으로 삼고, 실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태도가 발현되는 것이 필요함

○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다른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 둘의 관계를 이분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됨. 예술교육은 전통적, 문화교육은 동시대적, 예술교육은 분과적, 문화교육은 통합적, 예술교육은 장르교육, 문화교육은 사회교육, 예술교육은 보수적, 문화교육은 진보적이란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

---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는「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됨
-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정의)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함
-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정의)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말함

○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이해하기보다 통합적, 상호작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변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문화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분리하는 관점보다는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관점, 그것의 현재성, 사회적 가치 의미를 구하기 위한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즉, 문화예술교육은 “‘존재(be)’가 아니라 ‘상태(being)’이며, ‘주어진 것(the given)’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becoming)’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양적 확장, 성장주의적 관점으로 추진되었던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우리사회의 변화와 지역분권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실천적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심층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미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래에 대한 전망과 준비만이 아니라 지난 시기 문화예술교육에 누적되었던 관점, 성과와 과제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과정 없이 변화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그동안 축적된 문화예술교육을 보는 시각 차이, 용어와 개념의 다층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혼선이 가중될 것임

○ 15년 동안 지역에 축적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은 가치 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서 왜곡된 관점에서 추진된 문화예술교육의 양상이 공존하고 있음.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정책 15년이 된 지금, 동시대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과정이 사업화되는 것이 필요함. 중앙과 지역에서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나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단체, 교육강사, 기획자가 보는 시각이 다양하며, 양자 또는 다자간 괴리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략된다면 제반 영역에서 각기 다른 맥락의 실천들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2.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장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학교라는 장소로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정의)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특정 장소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 이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지향하는 현 패러다임에는 적절치 않음
-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시설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혁신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이는 생활문화, 평생학습,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의 영역에 기반이 되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함.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이분법을 넘어서 지역

사회라는 관점에서 두 개 영역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사업 개발 필요

○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주요한 정책적 방향과 관점,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책적 실행구조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은 곧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의미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하는 인적, 물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구함
- 학교문화예술교육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캠페인, 캐치 프레이즈 등을 통해 정책방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되,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정책방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나 방식을 변경할 필요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구조를 재정비하고 각 부처 간 역할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추진경과와 성과,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정책연구와 정부 발표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졌음.[2] 하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근본적인 이슈인 정체성과 가치, 실천적인 이슈인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초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반면, 중앙 주도 정책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담론의 장은 점차 소멸되었고 점차 정책의 목적이나 개념의 모호함은 지속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정책이 점차 문화다양성, 문화나눔, 지역문화(생활문화), 인문교육, 여가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정책 사업 간 유사·중복 지원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음
- 사업구조는 정책 초기 군부대, 교정시설,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기관 지원에서 점차 지원대상이 청소년, 청장년으로 확대되었고, 지역 추진체계 구축(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특정계층과 시설 중심 사업구조로 인해 모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어디까지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볼 것이냐?' 교육 현장의 실체는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 속해 있는데, 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지원사업의 구조, 내용적 범주, 사업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 사안임. 그간,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일컫는 용어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의 배타적 영역 구분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음
- 그러나, 학교도 지역사회 일부임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포용되어야 하고, 학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용어가 아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가치재[3]로서 의미가

---

2)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문체부, 20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략계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참조

3) 가치재란 공공재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타고난 가치', 혹은 본질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

있음. 따라서 수요에 의해 공급을 결정하거나 이에 따라 효율성을 따지는 것, 과도한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 등 공공의 과도한 개입과 같은 단순히 공공재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이미 '문화기본권'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이는 곧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기존 문화예술교육이 지원되는 범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예산 투여 대비 양적 효과, 성과의 추상성, 결과 및 성과 예측의 불확실성, 프로그램의 비균질성의 특성이 반영된 가치재로 봐야 하며 오히려 이러한 준공공재로서 가치재의 특성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이자 특질로 인정해야 함

○ 사회문화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철학과 비전 설정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전 생애적 교육을 통한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높이는 교육, 개인의 창의적인 삶을 디자인하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 사회적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교육, 창의적 영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

3.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간 정책적 관계성의 능동적 검토

○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삶으로 확장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기조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모든 현장과 연계되는 비전을 모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생활문화는 문화예술교육과 중첩되면서 정책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나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를 또는 생활문화가 문화예술교육을 포괄해야 한다는 이슈가 나타나기도 함. 그러나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는 각 정책이 추진된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며, 섣불리 통합하거나 양자를 각기 포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역량, 창의적 활동을 만들어내는 미래적 교육 패러다임에 기초해 시작된 것임.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에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그 기본원칙을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자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 권리로 설정되어 있음
- 생활문화는 그동안 예술정책에 기반을 두었던 문화정책, 전문가 중심의 문화정책을 탈

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적 수요가 매우 미미한 재화/서비스를 말한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가치재를 '시장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양보다 더 많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가 결정한 재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1217)

피하여 주체로서의 시민의 일상적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탈근대적 문화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됨

- 이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2014)에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음.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타 영역에 비해 예산규모와 사업규모가 현격하게 부족함에도 전국 지역에서 중요한 정책화두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정책적 화두가 좁은 의미의 예술정책, 전문가 중심의 문화정책 등으로부터 변화가 필요한 지역문화현실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생활문화 영역이 상호 협력과 연계의 요소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각각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동일하다고는 보기 어려움. 지역주민의 삶으로부터 각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법이 규정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두 가지 정책 사업의 구체적 영역 및 활동 설정의 모호성, 중복성, 고유성 문제 등이 발생함

※ **[참고] 생활문화 정의 및 유사사업 영역**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의 중 '생활문화' 정의)
-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추진, 교육과 활동으로 정책영역 구분하고 있음

- (생활문화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는 문화예술이 생활화(일상화), 문화화,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됨. 넓은 의미의 '교육'을 '활동'의 범위까지 확장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의 일환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생활문화) 문화예술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되는 과정에 문화예술교육적 방법이 주요하게 적용됨.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은 대부분이 상호배움의 과정을 수반함. 즉, '개인의 예술감상과 창작활동', '예술동아리 활동(교육과 사회참여)',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공동체 활동'에서 문화예술교육적 방식이 구현되는 것임. 개인적 영역에서 취미활동 뿐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형성과 가치 있는 생활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촉진제로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역할 필요. 시민들의 창작과 향유 확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자, 시민들의 일상문화(생활문화)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는 관점임

[표 II-1] 생활문화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비교

구분	생활문화	사회문화예술교육
개념 정의	· '생활문화'는 생활세계의 일상 문화 · '일상문화'라 함은 객관적 지식, 토속적 삶의 습관, 규범, 자연스런 행동 등 삶의 총체[4]	· 개인의 미적경험을 통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공감력을 키우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과정 및 활동 · 생애주기 또는 평생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주요 대상	· '사회화'될 수 없는 부분으로서의 개인 · 동호회 외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 및 그룹	· 기존 문화소외계층 외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개인 누구나
역할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 및 대중성을 확보(참여 경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 생활문화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활동을 촉진

○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각 정책 영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갖되, 상호 연계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은 '학습(學習)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 지원, 생활문화는 '활동과 실행을 통한 확산'을 중심으로 지원. 단, 기계적으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을 구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체의 성장 과정, 변곡 지점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4. 문화예술교육 담론 및 법 개정의 공론화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정의는 국가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방향 등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재조정되어야 함.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직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확대 가능한 논의구조, 시범사업, 제도, 사회적 공감 등의 영역을 확장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단지 예술의 속성 혹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등의 문제보다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 있음. 문화예술교육은 이미 근대적 질서의 해체와 학교 제도의 한계, 수명의 연장 등 현대사회 개개인의 생존과 미래 전략으로 조명을 받고 있음.
- 문화의 시선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이를 다양한 정책사업과 협업하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담론화, 가치체계 구축, 인력 양성 등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있음
-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아우르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에 기여"하는 '유네스코 서울어젠다: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방향 설정 필요
- 지역사회에서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삶의 주기와 함께 변화하고 확장되는 생활 영역으로서 접근되어야 하며,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음

4) 앙드레 고르, <에콜로지카>, 칼라파고스(2015), 57p.

- 지역사회 관점에서 학교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세대를 기본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계획・실행, 계층별 필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생활문화 영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동네(마을) 단위의 자원 발굴·연계할 필요가 있음
- 비 문화예술영역과의 융합교육 통해 공동체 유지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고,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실행 방안 개발 필요
- 장기적으로 현재의 중앙 중심, 장르 또는 사업 나열식 문화예술 관련 법령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체계 정비를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분권화에 따른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가치 공유 및 유관분야와 적극적인 연결과 협력을 이끌기 위한 동시대적 관점의 논의와 재정의 필요

○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질적으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법제적 수정・보완이 필요함
- 우선 개정해야 하는 조항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제4항, 제7항 등임.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정의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재정의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개념 정의에 따른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법적 정의 개정작업을 위한 공론화도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와 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의미가 없음. 정책 초기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확장을 위해 제도적으로 구분하였지만 15년의 경험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 다른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진행되든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 ‘학교와 그 외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단순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범주 및 개념을 재정의 함으로써 ‘삶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반영한 관점에서 삶으로 통합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있어 현재 법적, 제도적 정의가 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담론화가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은 책상 위에서 문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운영하고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의 현장과 그 실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념 정의도 이루어져야 함
- 즉, 몇몇 학자나 이론가들이 제안하는 추상적인 어휘들로 ‘정의내림’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길어 올려진, 구체성으로 묘사되고 설명되는 개념어들이 모아져야 함
- 현장을 꾸려나가는 주체들, 관찰자와 해석자들, 지원 행정에 참여하는 이들의 저마다의 정의를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예술이 그렇듯이 문화예술교육의 넓은 스펙트럼과 풍부함을 담아내려면 몇 줄의 문장으로 합의하려는 접근보다는 무수히 많은

정의들이 모이고 공유되고 그것들이 서로 경합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정체성 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겪고, 견디고, 나아가 즐기게 하는 과정이 곧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의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포함되어야 하며, 지구생태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전염병 및 질병의 확산에 따른 일상의 삶의 변화와 사회인식의 변화에 대한 관점이 공론화의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제기되어야 함

3. 정책 지원체계 개편과 다각화

1.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구조 및 방식 개선의 필요성

○ ‘20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예산은 총 1,369억[5]이며, 이중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은 674억으로 49%를 차지하며, 총 1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청장년과 노년층 대상 사업은 주로 특정한 계층(군장병, 재소자 등)이나 시설(산업단지, 노인복지관 등) 대상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의 성과는 그간 양적 확대를 주로 언급하고 있음. ‘06년 대비 ‘16년은 예산은 8.4배, 참여자수는 4.2배, 지원시설 수는 3.7배, 예술강사는 3.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6].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를 보면 최근 10년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평균 9.2%,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은 평균 17.8%[7]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및 영향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정책 효과가 양적 성장에 비해 미미한 이유는 중앙 중심의 경직된 하향식 사업 구조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책 단위에서 설정한 계층이나 대상을 위한 인력 파견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역 특성이나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음

※ **(분절성)** 정책 방향과 목적이 모호한 특정 계층이나 대상 중심의 나열식 사업 확장으로 사업 간 위계나 체계가 불분명하며,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단편성)** 주로 비 문화시설 대상 단체나 강사의 일 년 단위 파견방식 지원으로 사업의 종료가 곧 프로그램의 종료로 연결되어 지속성이나 확장성을 가지기 어려움
※ **(경직성)** 실내 공간을 활용한 00회차, 00시간의 정기 회차별 교육방식으로 정형화되어,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교육 설계가 어렵고, 타 영역(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부족함
※ **(제한성)** 특정한 계층·시설에 편중되어 취약계층 대상으로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일반국민들은 시간과 장소, 내용을 선택할 수 없어 참여가 제한됨

5) 해당 예산은 국고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 지방비 예산은 포함되지 않음
6)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中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참조
7) 문화향수실태조사 2008~2018(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참조

2.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다각화 및 유연화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 수요에 맞는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와 학생에게 충분한 지원) 현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신청시수 대비 일괄 축소하여 지원하고 있음[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화를 추구하고는 있으나 교육이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모와 기간이 필요한 바, 현재와 같은 일괄 배분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별, 학교급별 실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지원 방향을 설정하되, 가급적 선정된 학교별로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교사-예술강사 협력시스템) 교육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학교와 예술강사가 상호 희망할 경우 우선 재배치하는 제도를 넘어서, 학교와 예술강사 사이에 기존에 협력이 잘되었거나 협력가능성이 만들어진 경우, 두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차시,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여 제출할 경우 운영 권한을 학교와 예술강사에게 주는 교사-예술강사 협력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학교 선택권 강화) 학교에서 원하는 장르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들어, 학교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고(예시: 특정 기간 집중 등), 다양한 장르를 조합할 수 있고(예시: 전반부 국악, 후반부 음악 등),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예시: 현장방문 체험형 등) 지원방식 변경함으로써 학교에 지원 선택권과 운영 자율권을 주되, 내실화된 운영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술강사 배치 유연화 및 평가/연수제도 정비) 현재 학교별 1인 강사 파견 방식을 넘어서서, 학교의 수요에 맞게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사업운영 방식에 맞추어 강사 평가 시스템 및 연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연수제도를 정비하여 평가-연수-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 있음

○ 재구조화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일반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 설정 필요.

- 사업 성과평가 지표는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 과정, 결과의 단계에 따라 구성되는 바, 재구조화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적합하게 평가지표를 설정할 필요 있음
- 특히 결과 단계에 해당하는 지표는 사업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성과지표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임

○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통해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양하고

[8] `19년의 경우 학교가 희망하는 1순위 분야의 약 60% 정도의 시수만 선정·지원되고 있음

차별화된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기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와 동시에 이와 차별화된 단체 중심의 지역연계형 프로그램 사업 신규 개발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이원화 검토 필요

- (학교와 지역의 연계) 학교 안의 교육시스템은 매우 경직되어 있고 학교의 자율성조차 개입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학교 밖으로 시야를 넓혀 지역의 시설과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학교 안이라는 제약을 벗어나, 학교 밖 지역 단체를 통해 학교로 들어가는 형태 혹은 학교 밖 문화예술 공간에서 학교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 등의 방식으로 연계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시설과 자원 정보화, 공간별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질적 제고, 기초 단위로 학교와 지역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협력 플랫폼 마련 등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지역별 환경적 특성 및 시설과 자원의 차이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교육 단체 프로그램의 다양성 개발) 개인이나 운영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및 활성화 필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가로 구성된 단체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설계, 제공,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되어야 함. 또한, 단체 지원방식이 유연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자원 및 정보 공유, 단체와 기초재단, 교육청 등과의 연계, 각 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 학교와 교사 대상의 안내, 학교와 단체 간의 매개자 육성 시스템 마련 등이 요구됨
- (주제 프로젝트)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가 혹은 단체가 주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사업 지원 필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주제(예시: 진로, 평화, 폭력, 공동체, 관계, 성, 안전, 봉사, 흡연 등)에 대한 학습 요구가 있으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계몽적 수업이나 지식전달 수업, 단순 체험수업으로는 아이들의 문제의식을 키우기 어려움.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가 주도로 주제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에 문화예술교육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교 안 담당교사와 학교 밖 기획·매개자 양성을 통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 안 담당교사 양성) 학교 내에서 담당교사는 문화예술교육 실수요 포착, 협조적 분위기 조성, 교육의 실행가능성과 수용성 제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의 인식과 역량이 매우 중요함. 이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제공하되, 더불어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교사(직무연수자), 잠재 교사(교대·사대생) 대상으로도 체계적인 연수를 제공할 필요 있음
- (학교 밖 기획·매개자 양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집단인 예술강사가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력경로를 발굴하고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예시: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자)이 지역 내에서 지속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개인과 단체를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3.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전환과 지원구조 개편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추진경과와 성과,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정책연구와 정부 발표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졌으나[9],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근본적인 이슈인 정체성과 가치, 실천적인 이슈인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음

- 지난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특정 대상, 시간, 시설 중심으로 지원된 단일구조 방식, 소외계층 관련 대상과 시설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인해 보편적인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지역분권화 기조 및 정책 일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개개인의 생활권(기초) 단위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 제시한 자치분권과 포용국가 계획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문턱을 만들거나 배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나이, 성, 종교, 인종, 언어, 신체적 결함, 경제력 등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됨.

- 교육에 있어서 포용정책은 단순 접근권을 넘어서, 학습자 스스로 교육을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포용정책은 취약계층에는 학습 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계층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자원 분배를 평등하게 하는 정의 실현을 넘어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포용적 가치는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공감력을 키우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음. 이는 모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관계지향적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음. 공동체와 사회적 이슈, 지속가능한 삶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가지게 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시간, 장소적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접근성 : 일반계층과 취약계층 두 영역을 건강하게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
※ 시간 접근성 : 다양한 계층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시간 선택 전략, 주 1회 정형화된 주기에서 다양한 회차 구성 등
※ 장소 접근성 :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생활문화공간(생활문화시설, 생활SOC와의 연계 등), 민간 공간, 전용 공간(꿈꾸는 예술터) 등 연계 전략 등

- (공간과 장소 범위 확장) 사회복지시설, 평생학습관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기관(예시: 장애인복지관협회)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을 관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추진체계 재구성이 필요함.

9)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략계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참조

현 지원사업의 자격요건, 운영 장소 등을 확장하여 예술가, 강사, 기획자가 특정한 시설이나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적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상 접근 방식의 변화) 생애주기 측면에서 그간 주 교육대상이었던 아동·청소년 외에 워킹맘, 3040세대 등 다양한 수요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지역 내에서 생애주기별 정책대상을 접근한다면, 일반계층과 소외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생애통합, 계층통합, 장르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산어촌 등 소규모 지역 상황 고려)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면 예술가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부족, 정책 지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마을) 내 전문인력이 단계별로 성장, 피드백, 환류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즉, 읍면동 등 소규모 마을이나 지역의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예시: 농촌형 문화예술교육 사업 모델)

○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

- 그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특정 대상 중심의 복지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인구절벽, 고령화, 기후변화,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불균형, 4차 산업 혁명, 여가사회 등 미래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변화가 요구됨.
- 세대갈등, 인구절벽, 고령화, 기후변화,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젠더이슈 등 다양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이슈들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을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이자 속성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의 선회가 필요함
- 다만, 사회문화적 문제해결이라는 결과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교육적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함. 즉, 사회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성과 평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정책성과 기준이 아닌 ‘사회적 가치’ 개념과 논의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과정 중심의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함
- 단순히 소외계층 대상 사업의 양적 확대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가 아닌,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질적으로 파악하되, 그 기준에서 과정 중심 관점이 반영되는 새로운 평가기준과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가치 지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제인 환경, 평화, 인권, 소비자, 개발, 보건, 생물다양성, 양성평등, 다문화, 시민교육 등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영역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제시하는 17개 영역별로 문화예술교육 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주제 중심 프로젝트 사업’,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커리큘럼과 교육방법, 도구,

정책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구조 개편은 생태계 활성화 관점, 포용적 관점, 생활권 단위 접근성 향상, 지역분권 관점에서 단계적 사업 구조와 지원방식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생태계 활성화 관점)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 개편 시 사업의 영역과 중앙-지역 간 역할 배분뿐만 아니라 현장 주체의 성장과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함. 특히, 지원내용(프로그램 단가, 횟수 등), 지원 기간(8개월 공모 지양, 다년도 지원 등), 운영지침(정량적, 정성적 성과목표 검토), 예산지침(인건비 상한선 등) 등을 유연화·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포용적 관점) 포용적 관점은 누구나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 권리로써 문화예술 교육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취약계층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 지원대상이나 시설을 기존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배제나 차별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지원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여 지역별로 수요와 여건에 따라 자체 사업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음
- (생활권 단위 접근성 향상) 생활권 단위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 공간, 프로그램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안정화된 공간 거점을 구축해야 함. 지역별로 공급과 수요 자원 현황이 매우 상이하므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방향 제시하기보다는 광역-기초 간 협의를 통해 지역별로 사업을 기획·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초 단위 거점을 구축·지원, 생활권 단위 공간의 연계·협력, 비정형 교육활동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분권 관점) 지원방식의 혁신과 추진체계의 분권화는 정책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과 지역 단위 실태조사 및 정책·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등 합리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과제 추진을 검토해야 함. 특히, 경직되고 정형화된 공모사업 지원방식의 개편,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활동방식 유연화, 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체 권한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4. 미래 기술 활용한 창의적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 4차 산업혁명은 20세기 말 이후 학문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융합 담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융합형 예술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 디지털미디어의 도입 이후 활성화된 예술 장르들 사이의 융합, 예술과 기술의 융합 성과들을 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응용함으로써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할 수 있음. 이는 예술가로서 자신이 교육받은 예술 장르 내의 창작과 향유 관습을 과학 기술의 새로운 요소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심미적 경험을 실험하는 창의적 과정에 해당됨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목표를 실현할 물리적 환경의 구성이 필수적임. 융복합 교육을 위한 인프라 조성, 새로운 교육과정의 구성,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구성이 요구됨

- (융합과 협업) 융합작업에 있어서 ‘협업(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개념 재정립 필요. 대부분 협의 목적과 대상·범위를 정해놓고 작업적인 교류를 통한 협업방식이기에, 단순 매체융합적 협업(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따라서 프로젝트 구상 단계부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협업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술의 본질적 의도와 예술적 지향점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타 장르의 작업방식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예술과 기술의 언어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은 물론 이를 교육 할 수 있는 강사풀 확보가 필요함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른 장르 간 결합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며, 서로 다른 분야 가운데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임. 시대변화에 따라 기술 관련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한 예술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예술과 기술의 접목을 통해 전 연령 개인의 삶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을 것임
- (‘사람’과 ‘현장의 수요’) 미래 사회에 사람과의 관계망을 더욱 견고히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과 질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수립에 앞서 대내외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현장의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 자칫 ‘기술’, ‘융합’에 매몰되면, 융·복합이라는 틀 안에 갇힐 우려가 있으므로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융합형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장르간 융합>, <예술과 기술의 융합>, <예술과 사회의 융합> 범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물리적 환경 조성) 단기적 관점에서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창작·교육 공간을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질적 향상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연구·교육·연수에 특화된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할 것임

- (제도적 환경 조성) 교사와 매개자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예술인, 기획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과학기술자, IT전문가 등과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이 필요함. 참여하는 주체들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가는 관찰과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융합이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하여 제도적 지원이 되어야 하며, 평가도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
- (플랫폼 구축)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안의 공유, 교육방법의 공유, 성과의 공유를 목표로 하나, 장기적으로는 자발적·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교사, 매개자, 학습자가 함께 플랫폼을 매개로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또한, 실감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경험을 공유하고, 예술과 기술의 사회적 담론 연구 등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아카이브 서비스가 필요함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지향점 : 융합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심미성의 체험

	예술 장르간 융합	예술과 기술 융합	예술과 사회 융합
방향성	■ 각 장르의 '자기전문성'을 기반으로 예술의 내적 융합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복합적 경험 구성 ■ 기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을 바탕으로 확장된 미적 경험 추구	■ 기술의 예술적 활용 시도를 통해 전통 예술과 전혀 다른 방식의 예술 활동 및 연구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AR, VR, AI, 빅데이터, IoT 등)과 예술교육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심미적 체험의 영역을 넓히는 데 초점	■ 동시대 사회 문제(기후변화, 인간소외, 트랜스휴머니즘 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예술 창작을 통한 문제 해결 경험 ■ 기존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 예술교육을 바탕으로 확장된 미적·사회적 경험 추구
교육자·매개자	■ 전통적 예술 장르에 전문화된 교사들 사이의 융합을 시도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단계적 연구·개발·시행 필요 ■ (교육자)각자의 전문 영역을 존중하는 방식의 학제간 융합 고려 ■ (매개자)다양한 장르를 이해하고 하나의 융합형 교육으로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예술과 기술의 융합 및 예술교육자의 기술 경험을 통해 사고와 교육 방식의 확장을 위한 제도적, 인적, 물리적 기반 마련 필요 ■ (교육자)현장에서 기술 활용한 수업 가능하도록 단계별 재교육, 제도적 지원 필요 - 1단계(기초): 오픈 소스, 블록코딩,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팀티칭 교안 개발(30h 이상) - 2단계(심화): 블록코딩, AI 등을 활용한 팀티칭 교안 개발(30h 이상) ■ (매개자)예술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시범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사회 안에서 사회의 고민을 함께하는 예술 창작 경험을 고취시키는 기존 예술강사 연수 강화

리소스 플랫폼 (웹)	■ 기존 arte 라이브러리[10] 활용 방안 검토	■ 기존 arte 라이브러리 활용 방안 검토 ■ 연구·교육 자료 아카이브화와 지속 가능한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유 개념을 바탕으로 교안 개발 및 사례 공유 활성화 필요)	■ 기존 arte 라이브러리 활용 방안 검토
콘텐츠 개발·배포	■ 매개자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및 시범 운영	■ 예술강사 중심의 예술과 기술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시행 ■ 매개자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및 시범 운영 - 한국예술종합학교 '팀 러닝' 케이스 바탕으로 교육 방법론 연구·개발	■ 매개자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및 시범 운영 - 시리어스 게임(기능성 게임)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한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및 시범 운영
기반시설		■ 동시대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예술과 기술 기반의 선도 콘텐츠 연구/개발/배포를 이끌어 갈 제작 시설 단계적 실현 - 1단계: 각 지방자치단체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연계하여 교육에 활용·실효성 검토 - 2단계: 예술강사 및 매개자의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한 제작시설 마련 및 제작 교육 플랫폼으로 기능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

5. 생활밀착형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확충 및 인프라 활성화

○ 자치 분권, 문화정책의 분권 및 정책사업 이양 흐름 등에 따라 중앙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에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 현재의 중앙-광역 중심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기초 단위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 특수성, 복잡성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중앙과 광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중앙-광역-기초로 확장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요자 맞춤형,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기초 중심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중요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욕구·수요 조사, 적합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권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인적・공간・시설 자원, 소재자원을 발굴, 양성,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 혁신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협력망’을 구축해야 함. 이는 기존 문화기반시설과 다른 고유목적을 가진 전용공간이자 문화예술교육의 복합적 기능을 총괄하는 거점으로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다양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컨텐츠에 대해 연구・교류・협력・ 교육할 수 있는 공간임

- (전용시설의 주요기능) ①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방법을 개발, 서비스하는 혁신센터로서 문화예술교육 R&D를 위한 학제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연구자, 지역문화 활동가, 지역사회 이슈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Labs의 기능, ②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간, 인력, 단체・기관들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소통, 공유, 협력의 플랫폼 기능, ③일상성 속에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현재 학교-사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체계를 “지역(생활권)” 차원으로 통합적으로 접근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활용
- (조성 확대 방안) 독자적 시설로서 지역 유휴공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전국 시도의 시·군·자치구를 생활권 단위(인접 시군구)로 구분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함
- (전용시설 활성화)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목표를 설정하고, 전용시설 기능에 따른 역할 구분(예시: 거점형, 생활형, 복합형 등) 및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전용시설 간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간 운영계획 수립,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 역할 분담, 인력·단체·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등이 필요함

○ 개별 사업 지원체계에서 지역밀착형 거점과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로 정책 지원체계가 전환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의 개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일상 특히 관계 속에 밀착하기 위한 거점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밀착형 거점(공간, 플랫폼 등) 확보가 필수적임

○ 또한, 중앙-광역-기초 단위 추진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앙, 광역, 기초 단위의 정책적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함

- (중앙과 광역의 역할 변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이슈인 '지역화'의 문제를 구체적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이를 보임.–이는 다만 지역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확장,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을 매개조직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광역자체 계획 포함)-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는 서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광역-기초 협력 활성화 환경 조성)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필수적임. (예시: 광역과 기초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인력 연수사업,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경험 공유 및 지식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네트워킹 등)
- (민간 단체 지원의 기능 조정)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 사업은 상당부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이관하여,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중추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교육진흥원은 지역분권형 지원체계를 구축, 지역에 대한 컨설팅·평가 기능 수행하기 위한 인력양성, R&D, 정책 연구, 통계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핵심업무로서 기관 체제 재편할 필요가 있음

4. 지역 현장 중심의 생태계 활성화

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통한 문화분권 실현

○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사회 경제 인프라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화의 정책 과제는 시대적 필수 과제임.

-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의 지역적 삶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문화”라고 정의함.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은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 지역문화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역사적, 생활양식, 글로벌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문화분권 정책이 실질적 문화자치로 가려면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이 과정에서 문화 행정 혁신과 전달체계 전환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함

○ 문화 분권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며, 지역의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기반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가 함께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의 분권은 단지 공연장 등 지역 문화공간 중심의 하드웨어의 분권만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문화교육 환경의 분권과 인적자원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분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각 지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프로그램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수요자 맞춤형,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기초 중심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중요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

-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욕구·수요 조사, 적합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체계 필요
- 생활권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인적·공간·시설 자원, 소재자원을 발굴, 양성,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탈중앙화와 분권화, 중앙-지역(광역-기초)의 협력체계 재구성,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권한 및 역량 강화, 기초지자체-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실현이

필요한 시점임

- 기초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기초센터)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필요. 기초센터의 정의와 필요성 근거마련, 지역 문화분권 관점에서 기초센터의 설립의 필요성, 광역과 기초센터의 역할 관계 정립,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기초센터의 타당성과 필요성
- 기초 센터의 운영방안 계획 수립. 기초 센터의 기관 성격, 지정 범위와 선정 절차, 기초센터의 지정 원칙과 조건 검토, 기초 센터의 규모, 역할, 운영의 장기계획 수립
- '지역-학교'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상호지원 및 교육부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체계 정비
-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예시: 아난딸로형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연계,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
- 지역의 마을학교, 마을사업, 문화도시 선정 지자체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 일상의 통합성을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정책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그려진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혹은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문화예술교육은 생활문화, 평생교육, 문화강좌, 도시재생・문화도시・복지영역과 일정한 연계성을 가지므로, 독자적 사업전략과 함께 연계 전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확장 필요

- 기초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재원・인력・시설 문제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교육시설(지역센터), 평생학습관 등을 공동 활용하면서 단계별・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 단위 통합 운영 모델이 만들어져야 함(연간 사업 공동 구상, 교육프로그램 구성 협의체 구성 등)
- 중앙 및 광역 단위에 가칭 '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실질적 협력이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조정, 개발, 협력 체계 구축
- 광역 또한 기초단위 통합운영모델을 위한 광역중간지원조직(지역센터-광역평생교육진흥원-광역생활문화협의체 등) 협의체 구성(시민, 전문가, 관계자의 성별, 세대별, 연령별 균형있는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를 갖추어 구성)

2.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네트워크 강화

○ 문화예술교육은 '개별 사업' 지원 정책에서 '지역밀착형 거점'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활동의 결과가 예술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 밀착되기 위해서는 사람, 관계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 지역밀착형 거점(공간, 플랫폼 등) 확보 필요. 사업 재설계 혹은 이관과정에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또한, 지역센터(광역)와 기초단위 거점 기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함
-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자원(인적 자원, 공간 자원, 소재자원, 재정자원 등), 매개 협력 조직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기반의 자원발굴, 연계 및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가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개발·실행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야 함
- 예술장르·대상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로 확장하고, 문화다양성,환경문제,인권,고령사회,지역재생,고독,아동·청소년의 관계형성 취약·공동체 문화 소멸 문제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필요

3.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분석

○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개별성을 극복, 관계·맥락 중심으로 포괄적 정책사업 설계 통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가 관계성을 확장하고, 일상의 다른 영역과 연계성 높일 수 있도록 재구성 필요
- 특정 대상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은 개별화되어 각 사업의 파급력, 사회적 연계성에서 취약, 사업적 연계와 지역사회에서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함.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정책사업이 사회적 확산(이슈 생산, 관계의 확대, 경험의 확산 등)에 취약성 보이는 결과를 야기함

구분	기존방식	전환방식
사업방식	개별사업방식	포괄사업방식
활동방식	대상별 활동	관계 활동
주된 성격	특정대상 중심	연계성 확장

○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체험을 경험한 학생 등 수요자는 기존에 학교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학교 밖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요구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학생의 경우 선호하는 수업방식과 바라는 점에 대한 응답으로 실습·표현형, 직접 만들어가는 수업,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에 대한 요구가 각각 1순위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현행 운영 중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예술교과 연계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 중 문화예술교육 등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운영은 감소 혹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 현장체험 학습 등 학교 밖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운영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지역과 연계 혹은 협력(인력 연계, 시설 및 공간 연계, 지역특성 콘텐츠 연계,

지역 네트워크 행사 연계 등)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는 학교는 40% 내외의 수준이지만, 향후 이를 희망하는 학교는 80%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과의 연계협력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이 기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생각하고 깨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안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학교 밖의 예술적 공간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구조는 정책사업의 전달체계를 넘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음

- 기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는 이러한 전달체계 중심의 사업구조 안에서만 이해되었으나, 최근 예술강사, 지역센터 관련 이슈 등으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의 증가,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발표,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계획 등은 향후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와 공간, 관계들이 등장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확산과 전문화,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조직의 등장과 사업들의 확산 역시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행 과정에서 형성된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체, 자원(공간, 사업, 예산 등),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생태계 관점은 상호작용과 순환구조를 전제로 하는 바,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간의 상호작용, 자원의 전달체계, 정책 효과의 확산과 순환의 구조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내·외부구조를 구분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계획과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주체, 공간, 사업, 예산 등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이들을 둘러싼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 있음. 기존의 지역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분석은 대부분 정책집단 및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유아·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생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라는 장소 혹은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을 넘어서서 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생애주기 관점에서 유아·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건강하고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주체를 발굴 및 양성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작동할 필요가 있음. 아래 세 가지를 기획하고 촉진하고 지지하고 점검하는

지역사회 공론장과 협력적 실행 체계 마련과 운영이 필요함

- 준비된 주체의 조사 매핑과 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예시: 조사・연구사업, 포럼, 교류사업 등)
- 잠재적 주체 발굴과 성장 지원(예시: 공고사업, 조사・연구사업, CoP지원, 아카데미 등)
- 외부주체의 초대와 지역 밀착 혹은 특성화 기반 협력 프로젝트 추진(예시: 학교기반 문화예술교육 리빙랩[11] 등)

4. 문화예술교육 지역 생태계 기반 고도화

○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형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지역분권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임. 그런데 그동안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대부분 프로그램 실행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허약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기 위한 자기 질문과 발견, 궁리, 실행, 리뷰와 같은 경험들이 자유롭게 수행될 수 있는 지원환경 필요함. 연수나 학습공동체, 창의랩 등 사업을 확장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공모 방식은 공공재원에의 접근을 공개적으로 한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경쟁적 방식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에 지역사회 안에서 긍정적 시너지로 작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공모사업 이외에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력적 참여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단체 등의 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사업 등 R&D 기반이 취약하며 지역적 편차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확장되고 있는 것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교육 주체의 전문성과 더불어 활동 영역 간 연계로부터 확보될 수 있음. 프로그램 다양성은 단일장르에서 장르융합으로, 활동 영역의 다양성은 마을 만들기 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등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학교 등 교육공동체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확보될 수 있음

○ 중장기적 관점의 기반구축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토대를 함께 구축해가는 것이며, 이를 위한 지원과 협력의 과정이 지난하고 꾸준하게 진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임. 이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지원영역이 교육사업 자체였다면, 이제는 지역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국면임

---

[11]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 중앙·공급자 주도 기반 고도화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역 생태계 기반 고도화로 중심축의 전환이 필요함

- 중앙·공급자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지금까지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구조 속에서 지역에서는 대체로 사업목표, 정량적 성과에 맞추어 동원, 소모되는 경향이 큼. 문화예술교육 지향점을 가진 주체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채 다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활용하거나 기존 문화센터, 문화강좌 등의 강사들이 진입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하향평준화 현상을 야기함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즉,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돕는 관점에서의 기반 구축이 필요함.
-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기반 영역을 구축해가야 함

○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고도화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의 성격을 플랫폼·허브기관으로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허브의 정체성은 유연하고 유기적인 쌍방형 관계성이 조직문화로 구현될 때 활성화될 수 있음. 때문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광역-기초)의 이해관계조직 전반에 걸쳐 조직문화 체질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뿐만 아니라 지역센터(광역),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직,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제반의 이해관계자들이 조직문화 체질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획과 실천들이 프로그램화되는 것이 필요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심의 기반사업을 넘어 문화예술교육 지형 전반의 기반정책 관점으로 ‘지역마다’의 자체 기반이 강화되어야 문화예술교육 전반의 기반 고도화가 가능함

- 그동안 기반정책은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되는 정책 계기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필요에 따라 다소 파편적으로 추진되었음
-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는 기존과 같이 중앙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이 활용하거나 연계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화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형 변화에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함
- 이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반사업의 관점을 넘어 문화예술교육 전반의 기반정책의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슈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반구조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그래서 향후 기반 고도화는 지역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체적 현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생태계에 다양하고 지속가능하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함
- 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정책 집행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에는 예술가도, 문화예술교육 강사와 기획자, 단체 등 모든 측면에서 인적 기반이 부족하며,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인적 기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춘 협력적 시스템으로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함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수요와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매칭 하는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기획하고 광역-중앙이 협력,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즉, 지역과 인적 기반 이슈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는 지역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등이 기획에서 실행, 성과평가까지 지역과 함께 구축해가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진 단체가 육성되고, 기반과 매칭되어, 그 철학이 현장에서까지 연결되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함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프로그램 다각화 위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필요

- 중앙-광역-기초 연계 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및 연수체계 구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연구 개발센터’(가칭) 운영. 문화예술교육 R&D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위상 확보 및 문화예술교육 R&D 기획,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 수행

○ 문화예술교육 R&D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 분야별 R&D Lab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중앙은 문화예술교육 가치와 새로운 담론, 콘텐츠 개발을 위한 R&D Lab을 지원하고, 지역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수요와 이슈를 해소하는 R&D Lab을 지원하도록 함. 특히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구체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작은 R&D Lab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성과관리 체계는 중앙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음. 문화예술교육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중앙의 협력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지표 개발과 평가가 지역에서 추진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로 작동될 수 있으므로 중앙과 지역이 성과관리체계를 처음부터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5. 인력 현장 활동 지원 기반 체계화

1.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추진 현황과 과제

○ 지난 15년간 약 10만 여명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통해 현장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현장에서의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함

- 연수 참여 후 예술단체 설립, 후속모임(교육개발, 예술창작) 형성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현장으로의 선순환 및 다양한 인력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그러나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기본 개념, 지향점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채, 개별 연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해옴에 따라 시대, 시기별로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 철학이나 정체성을 반영한 연수방향이 체계적으로 설정되지 않았음. 그리고 정책 트렌드, 현장에서의 즉각적 이슈와 수요 등에 기초해 병렬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핵심 연수대상 및 핵심역량 영역이 불분명하고, 문화예술교육 연수과정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한계 발생함. 또한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심화되지 못함

○ 정부 지역분권화 기조에 따라 중앙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정책, 조사연구,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기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이러한 기반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사업에 대한 미래적, 종합적 추진계획 마련 필요함. 문화예술교육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및 단체, 기획자·강사를 포함한 전문인력 전체 연수 프레임을 잡아야 할 시기이며, 공통 연수와 사업별 연수의 연계방안 고려 필요

○ 그런데 법제도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교육철학 없이 전문인력을 설정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강화 정책 목표가 모호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양성 또는 양산하는 '전문' 인력은 어떤 점에서, 무엇에 대한 '전문' 인력인가 15년 동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양성하고자 했던 인력은 무엇을 위한 인력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성과를 기대하였고 또 결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상 구체화가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철학을 재정립, 그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개념 정의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을 재정비하고, 핵심(코어)그룹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제도적 재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함

※ **[참고] 인적기반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질문**
- 중앙에서 담보해야 하는 인적기반체계의 핵심과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진화해야 하는 인적기반 핵심영역 및 체계는 무엇인가
-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의 지역현황, 현장에서의 성장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
- 문화예술교육 지역현장에 실제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와 재교육, 양성체계는 무엇인가
- 문화예술교육 지역화를 구축하기 위해 상향식 연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연수체계의 구축은 어떻게 가능한가
- 연수기반시설은 지역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등

1)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의 보완

○ 한편,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대상(「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서 정의된 전문인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와 현장의 실질적 전문인력(예술가, 예술강사, 기획자, 단체 등)과의 괴리가 존재. 이를 좁혀가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필요(문화예술교육사의 보수 및 재교육 등)

- 문화예술교육사 문제해결을 위해 전체 인적기반 틀 안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상, 역할 등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 역량 등을 논의할 필요(현 상황 상, 자격증 발급 확대나 무리한 1급 자격 발행 등은 신중히 접근)
-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교육청 단위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적극 추진, 지역 중심의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필요성 대두 등 변화하는 환경 및 수요를 반영하여 연수대상 및 연수프로그램을 세분화 필요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과 현장 활동력과의 괴리를 좁히고 실질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적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연수, 현장실습(‘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등 실천역량 강화 및 현장연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포함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의 예술적 실천역량(예술체험, 창의적 활동, 현장연수 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수체계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 교육과정을 내용적으로 견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활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보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있는 다양한 지역 내 시설(평생교육, 사회복지 기관 등)로 문화예술교육사 활동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매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학교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의 인력 양성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를 이해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활동 인원 중 약 13%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외에 각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나 별도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12]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교 예술강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집단인 예술강사가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력경로를 발굴하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다각화 시 문화예술교육가의 역할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예술강사들이 기존의 강사 역할을 넘어서 기획·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경로를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존 인력(예술강사)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예: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한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가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개인과 단체를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지역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가[13]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에 적합한 교육을 기획하고 연결해줄 수 있는 기획·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있음

- 개별 담당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므로, 학교에 필요한 교육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역 자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음
- 이에 지역 내 3~5개의 학교를 담당하여 학교별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의 정보와 자원을 적절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획·매개 인력이 필요함
- 특히 자유학기제(혹은 자유학년제)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기획·매개자들의 육성 및 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위한 연수체계 다양화, 지역화, 전문화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서 '어떻게'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 내용적 측면을 먼저 규정하고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프레임을 재구성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음. 또한 총체적 관점에서 시대성과 환경변화와 호흡하는 문화예술교육 철학을 책임 있게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 연수체계 구축이 중요함

---

12) <학교문화예술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예술강사 활동 현황조사>, 한국노동연구원(2016)

13) 문화예술교육가의 역할은 크게 강사, 기획자, 매개자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에 강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획자의 역할, 지역과 학과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로 예술강사 혹은 '학교 예술강사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혹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강사를 특정 하는 용어로, 사업 내에서 이들은 주로 강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 모두에게 창의성이 필요하고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달리 예술이 사라진 문화예술교육의 자조적 반성과 쟁점이 반복됨. 예술가의 예술적 실천과 예술교육강사의 연수방법의 괴리로 인해 예술의 본질과 연동되지 않고 교육방법에 천착하는 문화예술교육 현상을 극복하고 예술의 본질과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연수내용 단계적 심화가 필요함
- 기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수는 문화예술교육 이슈별 처방전을 제공하듯이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질적 성장이나 지속성 면에서 한계적임
- 연수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좋은 사람과 조직(예술교육강사, 기획자, 문화예술교육 단체 등)'을 남게 하여,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으로 전환 필요
- 전문인력의 경력단계를 고려, 연수의 구조를 체계화(경력단계별 연수 세분화)하여 각각의 내용과 방식을 달리 설계할 필요(기본, 심화, 고급 연수 등) 경력단계별 연수구조는 문화예술교육사를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스스로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연수를 설계(러닝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자 주도형 학습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학교·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생애 관점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펼치기 위한 연수의 방향성을 지닐 필요

○ 문화예술교육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이 전체 연수과정에 토대가 된 가운데, 다양한 연수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연수체계 총 감독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체계를 전반적으로 동시대적 재구조화하는 총감독과 분야별 전문가 프로그램 감독이 위촉되어 문화예술교육의 동시대적 가치와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접목하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책임 있게 진행하도록 함
- 연수체계 감독제는 '연수운영위원회' 등의 형식으로 객관적 논의, 결정 구조를 동시에 확보하여 감독의 개인적 지향에 매몰되지 않도록 함

○ 한편, 지역화에 대응하는 미래적이고 혁신적 전문연수원 설립이 요구되나, 이에 앞서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공론화가 필요함.—
- 인구구조 변화, 지역화 등의 사회변화와 함께 문화예술교육가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수요가 있는지, 대규모 집체 연수 프로그램이 시대에 부합하는 것인지, 질적 방향 전환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14] 대한 사회적 질문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가치와 수요라는 차원에서 향후 몇 년 뒤 설립될 전문 연수원의 정체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함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인적기반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전문연수원 설립이 현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혁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창의적 접근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의 생산, 소비, 연구와 평가가 실제 작동되는 지역현장과 분리된 전문연수원이 미래적일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역의 공간을 발견하고

14) 문화예술교육기반정책의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20.1.22.), 최도인(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토론문 중

지원하는 현장기반 학습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열어놓고 접근하게 되면 중앙에서 설립되는 전문 연수원의 공간 개념, 기능과 역할, 규모 등에서 혁신적 접근이 가능함. 설립 추진과정에서 어떤 개념으로 설립하여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을 질적으로 제고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중앙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연수원 체계를 바탕으로 광역단위 및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연수체계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및 연수 기능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모든 층위에서 필요한 정책 기능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중앙의 문화예술교육 연수원을 설립·운영하고, 인력양성 및 연수 계획 수립, 연구, 평가, 지역 협력체계 구축 활동에 초점을 둠

[표 II-2]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및 연수 사업 기능 조정 방향

구분	핵심 기능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① 인력양성 및 연수 계획 수립 및 사업 개발 ② 문화예술교육 인력 실태조사, 수요 조사 ③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과 방법 개발 ④ 문화예술교육 연수 사업 운영, 평가 ⑤ 문화예술교육 연수 협력체계 구축(광역센터와의 협력)	문화예술교육연수원 설립, 운영 (연수 네트워크 허브 리더십)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① 광역의 연수 수요 조사 및 연수 체계 구축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연수 체계 구축	지역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기초정책거점	① 문화예술교육 인력들의 소통과 협업 플랫폼 ② 소규모 학습공동체 활성화 ③ 기초 지역 특성 기반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파트너십 매개자 연수 등)	광역-기초 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연수체계 구축

- 지역에는 예술가도, 문화예술교육 강사와 기획자, 단체 등 모든 측면에서 인적 기반이 부족하며,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인적 기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춘 협력적 시스템으로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함

- 즉, 중앙에 와서 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인적 기반 이슈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는 지역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등이 기획에서 실행, 성과평가까지 지역과 함께 구축해가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진 단체가 육성되고, 기반과 매칭되어, 그 철학이 현장에서까지 연결되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함 (지원사업, 행정에 매몰되는 양상 지양)
- 지역에서는 독자적으로 연수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형 연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역할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협력연수체계를 지원, 구축하도록 함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질적으로 구조화함에 있어 중앙-광역-기초의 협업 체계를 원칙으로 각 단위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 하에서 각 지역별 전문인력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는 인적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사회적, 정책적, 기술적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타 영역과의 협업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다변화되는 문화예술교육 수요(needs)에 대응하고 창조적 혁신이 지속가능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장에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담보한 다양한 민간의 연수주체를 발굴하고, 공동기획, 공모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하게 함으로써 '플랫폼형' 연수체계로 확장성을 가져야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급하는 연수 방식이 아닌, 다양한 현장에서 교육철학과 연수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민간전문 단체·프로그램과 연결할 필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체 연수프로그램 틀 안에서, 세부 프로그램은 민간 공모(또는 인증)를 통해 추진
- 인증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상시화, 민간에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 결과적으로 교육사와 민간·현장 생태계 모두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정책 구조
※ 예시 : '노인'에 특화된 대표적인 연수기관 등 전문적인 거점이 많아지는 구조
※ 차년도 파일럿 형태 시범운영 추진해볼 필요

3. 창의적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위한 연수내용 변화 방향

○ 디지털 전환, 신기술 확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관련 리터러시 기반 필요

-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논쟁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 환경이 일상 문화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술적 상상력이 기술적, 사회적 상상력과 융합되고 상호관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개념의 예술적 리터러시가 무너지고 있으며, 각각에 요구되는 리터러시들의 상호이해와 학습이 요구되고 있음. 기능적 차원의 예술과 기술의 결합, 예술과 타 영역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 매개자, 창작자 간의 리터러시 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해 표출되는 문화를 공유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정책, 교육, 연구, 국제교류 등에서도 이러한 한국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불평등과 제약 없이 모두에게 열린 문화예술교육, 삶 전반으로 확장되는 문화예술교육의 기조에 맞게 내용이 재구성, 확장되어야 함. 기능적 요소보다 본질에 훨씬 집중된 예술, 광범위한 인문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를 이끌어왔던 근대적 가치관은 물적인 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밀레니얼 세대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과 함께 전 방위적으로 해체되면서 다양한 가치관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한국사회는 현재 경제적 저성장과 양극화, 환경오염,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이슈, 남북긴장관계의 평화적 해소, 사회적 불평등에서부터 범죄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제반의 요소로부터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이 펼쳐짐. 생태, 평화, 페미니즘 등과 같은 가치는 담론 중심의 이전 시기와 달리 정치적이고 실천적으로 발현, 확산되고 있으며, 파편화된 현대적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활동들이 사회, 경제, 문화 영역 전반에서 꿈틀거리고 있음

- 예술은 사회・문화・과학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워지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필요충분조건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은 이와 같은 변화에 주목하여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함

○ 한편, 시대변화에 따라 기술 관련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한 예술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예술과 기술의 접목을 통해 전 연령 개인의 삶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구분을 넘어서는 관점으로 단계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융합교육의 필요요건으로 1) 전문 예술가를 (융합)교육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연수, 재교육 2) 전체 교육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기획자 역할 제시
- 융합의 개념은 서로 다른 분야 가운데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며, 아직은 융합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는 점이 모호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교육이 미래 세대 역량으로 연결되는 시대적 요구가 존재함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경험을 통해 심미적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함. 예술적 관점에서 창의성의 핵심은 ‘자기 고유 언어(나 다움)를 찾는 것(주체성 찾기)이며, 융합적 관점에서 창의성은 나와 타인의 차이를 알고(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점과 타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점 인지), 새로운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임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른 장르 간 결합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경험을 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됨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음. 단,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자기 전문성‘(예술 장르에 대한 철학)이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예술강사와 기술 강사의 두 분야에 대한 소양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단기간 교육으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예술과 기술의 언어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은 물론 이를 교육 할 수 있는 강사풀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이 중요함

※ [참고]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인적자원 부문 과제
- 교육/연수에 활용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융복합형 예술교육·연구 활동에 예술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 교사와 매개자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융합형 예술인, 기획자, 엔지니어, 과학기술자, IT전문가 등과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전문가 풀 형성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예술강사들을 위한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 관련 멘토링 운영,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
- 예술교육자와 협력할 수 있는 기술·공학·과학자 풀 형성

○ 현장에서는 예술강사를 통해 '예술', '예술가'를 만나고 싶으나, 점차 예술을 만나기 어렵고, 예술강사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예술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기초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심화 등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비전('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과 같이, '예술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고, 변화시킬 것인지 집중해야함
※ 변화한 현대예술 특성에 맞춰, 기능·장르위주 탈피한 유연성과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함

- 지역별로의 문화예술교육사 비중 및 편차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
-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부여되는 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필요한 연수과정(예: 예술체험, 창의적 활동 등)을 장기적으로 병행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예술적 실천역량 수준을 끌어올리는 체계적 보수 교육화
- 재소자, 군 장병, 장애, 노인 등 사회 구성원이 다변화 됨에도 불구, 대상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갖춘 예술교육가 부재. 추가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문역량의 다각화 필요,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특화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문화예술적 가치 외에도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사무처리 능력 등), 또한 공급 관점의 협업 중심에서 타 기관, 공간과의 협력적 관점에서 협업 역량 강화도 중요함
- 프로그램 중심의의 협소한 티칭(Teaching) 관점 보다는 러닝(Learning)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참여자 스스로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연수를 설계(러닝맵)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밀착된 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커리큘럼, 교안을 제공하는 기존의 연수방식은 의미를 상실함. 지역연계 연수 프로그램이 최근 시도된 것과 같이 지역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예술교육가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예술적 발견의 과정을 공유, 스스로 탐구・재발견하는 시간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기획될 필요성

6. R&D 강화 및 정보화 고도화

1. 문화예술교육 기반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와 과제

○ 지난 15년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콘텐츠개발, 통계·평가 분야로 꾸준히 연구 진행해오면서 문화예술교육 정책변화 계기별 연구주제 개발과 대응을 통한 정책근거 마련,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 및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예술교육 내용성을 확보하는 연구 기반 마련, 문화예술교육 정책성과 및 사업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 등의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연구기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연구 성과 활용에서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불안정한 예산구조 및 내부 연구인력 부재로 내부역량 축적 불가(연간 30여건 연구 외부용역 발주)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이 현장으로 확산되는 실천적 파급력에서의 한계 노정
- 단위사업별 효과(양적·질적), 평가(정책·사업), 만족도 조사연구 추진으로 인한 통계정보 기반 중장기 관점의 정책 발굴 및 환류에 한계 노정

○ 지역분권화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단계별로 지역 이관, 중앙은 정책, 조사연구, 교육의 종합 컨트롤타워가 될 것인지 종합지원 허브기관 또는 플랫폼이 될 것인지 등 기관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을 논의 중에 있음. 시대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기관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는 과정과 연동하여 연구개발, 조사통계, 인력양성, 국제교류 등 기반조성 사업도 그에 맞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그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다만, 문화예술교육 법령상 기반(연수, 연구, 국제, 홍보, 정보) 지원 기능을 기관의 핵심 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구성이 취약하여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적임

  ※ 기반분야 예산(80억,'19년) 전체 6.3%(독립계정 아닌 사업예산에 포함, 분산 운영되어 사업의 일관된 추진 전략 및 체계성을 구축하는 데 한계적)

- '20년 최초로 전문인력 양성사업 자체 예산(19억)이 확보됨에 따라 연수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는 출발점이 마련됨. 향후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연구, 국제교류, 홍보 등 기반 영역을 체계화하는 안정적 예산확보 및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함

○ 중앙과 지역의 R&D 기반 역할 분담 및 협업구조에 대한 전략 필요. 중앙에서의 R&D 기반과 지역에서의 R&D 기반이 동시에 재구조화되면서 상호협력에 기초한 공통의 R&D 기반을 구축해가야 함. 중앙에서는 지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기 정책연구, 통계기반 정책 개발

및 평가, 질적 연구, 지역현장 사례를 통한 상호 학습형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고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적 연구와 현장 사례와 이슈의 분석, 현장 기반 성과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성과평가, 정책개발, 교육콘텐츠 개발 등 중앙-지역협력형 연구과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센터에서 지금까지 구축한 R&D 결과물을 전반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지역과 공유하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분권화시대 문화예술교육 R&D 전략을 함께 수립해가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지역 내 R&D 기능이 약하다 보니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제안 등에서도 근거 부족으로 소극적으로 제안하거나 아예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지역센터(광역)가 재단 내 문화예술교육팀으로 포지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전담인력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교육사업 실행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R&D 시스템 체계가 부족하고 여건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 내 연구용역 수행단체 부재·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여 질 높은 결과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역과 통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 R&D 활성화 사업을 개발하되, 실제 문화예술교육 R&D 프로젝트는 광역 및 기초를 중심으로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

[표 II-3] 문화예술교육 R&D, 정책 연구, 통계 사업의 기능 조정 방향

구분	핵심 기능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① 문화예술교육 R&D 정책 개발 및 계획 수립. R&D 로드맵 개발, 지원사업 개발 추진, R&D 사업성과의 평가 및 자산화 ②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평가, 정책사업 개발 연구, 정책사업 성과 평가 ③ 문화예술교육 통계,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체계 구축의 허브 기능. 문화예술교육 통계 발표	• 문화예술교육 R & D 위원회 • 문화예술교육연구-평가센터 • 문화예술교육 통계 데이터 체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① 광역형 R&D Labs 운영 ② 지역 특성 기반의 실태조사 ③ 지역 R&D,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문화예술교육 통계 담당자 지정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기초정책거점	① 기초형 R&D Labs 운영	• 한국문화예술진흥원-광역-기초의 사업 협력체계

○ 기초 지역기반의 자원 발굴, 연계 및 협업 프로젝트와 지역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R&D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위상 확보 및 문화예술교육 R&D 기획,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 수행해야 함

-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자원(인적 자원, 공간 자원, 소재자원, 재정자원 등), 매개 협력 조직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활용 방안 연구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특성 및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문화 해결 효과 강화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프로그램 다각화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필요
- 중앙-광역-기초 연계 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및 연수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따라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효과성 연구체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함.

○ 지역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위한 인력·재정이 취약함. 지역분권 기반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위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수요·실태의 체계적 조사 필요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실태조사 위한 지표체계 개발, 지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역센터(광역) 협력체계를 구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내 '문화예술교육 통계조사' 항목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이 참여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의 체계적 평가·환류가 필요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니터링 평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효과성 연구, 효과성 연구 결과의 활용체계 구축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행해야 함

○ 또한 지난 15년간 지역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조사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성과와 이슈를 해석하고, 지역에서의 참여 동력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서 추진된 연구 성과들에 대한 가치적 해석과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학술적 연구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현장형 연구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R&D 역할 이 중요해지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창조, 지역사회 문제 해결, 통합예술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 분야와 비예술 분야의 융합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융·복합 기반의 학제적-현장 간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R&D 역량강화 및 R&D 구조개혁이 필요. 기획연구, 정책연구, 아카이빙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기획·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직접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확산하기 보다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연구개발, 지속·발전시키며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R&D Labs 활성화 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 '문화예술교육 R&D Labs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자산화에 초점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향임

○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가 개별화, 파편화되어있는 구조임. 보다 현장에 효용성

있는 R&D 생산을 위해 R&D 관련 전체 방향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질 관리하기 위한 ‘R&D 위원회’가 중앙-지역으로 구성[15] 필요

※ ‘R&D 위원회’ 역할 및 방향
- **현장의 요구, 내부의 수요 확인**을 통해 R&D 의제를 세팅할 필요. 위원회 위원이 심사와 연구 질관리 등 참여를 통해 일관된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체 큰 기조 하에,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중앙 R&D 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 전반의 R&D 과제를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뿐만이 아닌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R&D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하는 일종의 문화예술교육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R&D 위원회’는 구성 원칙과 운영방식 등에서 혁신적인 차원으로 구축되어야 함
- 지역에서의 ‘R&D 위원회’가 당장 구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R&D Lab을 지원하면서 발굴된 지역주체가 ‘R&D 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원회 시스템을 구축해가도록 함

○ 또한, 기존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창의예술교육 프로젝트 성과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연수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하여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연구 및 실행의 토대가 될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와 교육은 연속된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참여하는 주체들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가는 관찰과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융합이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하여 제도적 지원이 되어야 하며, 평가도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
- 다변화하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창작, 실험, 연구, 교육을 시도하는 교사, 매개자, 학생 지원을 통해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관련 체계적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네트워크(아카이빙, 공유 가능한 플랫폼*)를 통해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실감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경험 공유체계 구축, 다양한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아카이브 서비스, 자발적 연구 활동 참여 여건 조성 등

- 단기적 관점에서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창작·교육 공간을 융복합형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공간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불안정과 임대공간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모적 반복적 업무의 증가가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융복합형 연구·교육·연수에 특화된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회의공간, 연구공간, 실험·교육공간, 전시 및 쇼케이스 발표공간 등 융복합형 연구·교육·연수에 특화된 물리적 환경 조성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R&D 플랫폼은 참여자들 간 연결에 의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획이 함께 설계되어야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선언을 넘어 이에 대한 여건을 전반적으로 구축해야 함.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개발하거나 지역의 수요와 부합하도록

15) 외부 전문성 및 연구능력과 연계하는 C&D(Connect and Development) 방식을 통해 R&D 결과물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연계하는 조직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문화예술교육 R&D 플랫폼 동력 구축
- '플랫폼(Platform)'이란 참여자 간 연결(Connect)을 위한 장으로, 연결을 통해 가치(value)를 창출하는 것임.(예시: 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네이버, 공공플랫폼(문화N티켓, 문화포털)) R&D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R&D 결과물을 매개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연결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제공함을 의미함

○ R&D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 분야별 R&D Lab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중앙은 문화예술교육 가치와 새로운 담론, 콘텐츠 개발을 위한 R&D Lab을 지원하고, 지역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수요와 이슈를 해소하는 R&D Lab을 지원하도록 함. 특히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구체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작은 R&D Lab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성과관리 체계는 중앙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음. 문화예술교육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중앙의 협력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지표 개발과 평가가 지역에서 추진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로 작동될 수 있으므로 중앙과 지역이 성과관리체계를 처음부터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통계조사, 분석,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통계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센터와 동반성장형 R&D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함

- 분산형-네크워트형 연구시스템 구축・운영 (공동연구)
- 분산형-네크워트형 통계시스템 구축・운영 (공동조사)
- 분산형-네크워트형 평가시스템 개발 (공통지표, 특수지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증거기반 연구 강화하고, 내부의 분석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조사 시스템 및 DB 체계화, 분석 역량 강화, 통계의 근본적 목적인 서비스 역량 강화, 장기적으로 통계분석 팀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의 근거에 기반을 둔 가설・쟁점의 생산(미래정책방향을 추적(트래킹) 할 수 있는 지표와 가설 설계의 중요성 강조)

- 의견기반정책(opinion-based policy)에서 증거영향정책(evidence-influenced policy)으로, 나아가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로 발전할 때, 정책(사업) 품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됨. 따라서 증거기반 연구의 기초가 되는 통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16)]

16)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속성이 중요한 통계와 연구 형태로 일시적으로 생성이 요구되는 통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직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2019) 예술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정책토론회 자료집)

관계부처합동(2019.2)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교육부(2018).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2018~2022)

교육정책포럼(2019.10)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 학교예술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교육진흥원(2019). 미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내부자료)

문체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체부(2018). 문화비전2030

문체부(2018). 새예술정책(2018~20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융합 문화예술교육 주제 추진사업 모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교사-예술교육가 협력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획연수 결과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연도표(2005~2019) (*내부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문화예술교육 통계기능 강화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문화예술교육 평가체계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해외문화예술교육 동향 조사 (*내부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략계획(2018~20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신규모델개발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콘텐츠 연구회 결과보고서(문학기반 통합예술교육 연구)

<기타 자료(법령 및 홈페이지 등)>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2019.6,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2019), 혁신교육지구 예산 운영 길라잡이

Jeffrey Baumgartner, “10 Steps for Boosting Creativity”, www.jpb.com/creative/creative.php.

부록

1.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위원

○ 총 28명(외부 전문가 20명, 문체부-진흥원 관계자 8명) *소속: '19.10월 기준

구분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총괄/담론 분과 (9명)	단장	1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분과 위원	2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분과장
		3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분과장
		4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	*분과장
		5	**신정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분과장
		6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분과장
		7	**이경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내부 위원
		8	**박효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내부 위원
		9	**김세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협력실장	*내부 위원
학교 분과 (6명)	분과장	10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분과 위원	11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	
		12	**김혜경**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장학사	
		13	**하장호**	예술인 소셜유니온 대표	
		14	**남우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내부 위원
		15	**이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청소년교육본부장	*내부 위원
사회 분과 (7명)	분과장	16	**정민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분과 위원	17	**김지나**	감각사회연구소 소장	
		18	**백현주**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19	**유상진**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장	
		20	**최보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21	**박효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내부 위원
		22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장	*내부 위원
기반 분과 (8명)	분과장	23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	
	분과 위원	24	**김정이**	비커밍콜렉티브 대표	
		25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6	**안성아**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교수	
		27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28	**정인양**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내부 위원
		29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반교육본부장	*내부 위원
창의성/융합 분과 (7명)	분과장	30	**신정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분과 위원	31	**손경환**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팀장	
		32	**양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33	**차진엽**	콜렉티브에이 대표	
		34	**박효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내부 위원
		35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반교육본부장	*내부 위원
		36	**김세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협력실장	*내부 위원

2.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세부 추진경과

○ 총 46회 추진(분과회의 36회, 분과 통합 워크숍 1회, 분과별 공론화 8회, 종합 토론회 1회)

연번	구분	분과	회차	일시	안건
1	분과회의	총괄분과	1차	10.1(화) 12:00~14:00	공론화 추진단 총괄분과 운영 계획 논의
2				10.2(수) 16:00~18:00	
3			2차	10.23(수) 10:00~12:00	공론화 추진단 분과 운영계획 논의
4			3차	11.13(수) 10:00~12:00	공론화 추진단 분과별 회의결과, 통합 워크숍 운영방향 논의 등
5			4차	12.12(목) 16:00~18:00	분과별 주요 의제 점검 등
6			5차	12.30(월) 16:00~18:00	분과별 추진경과 및 주요의제 논의, 분과별 공론화 행사 운영방향 논의 등
7			6차	1.29(수) 16:00~18:00	분과별 공론화 행사 결과 논의 및 2월 대토론회 운영방향 논의
8			7차	4.24(금) 16:00~18:00	분과별 이슈리포트 수정 검토, 대토론회 변경계획 및 공론화 후속 방향 논의
9			8차	5.15(월) 15:00~17:00	대토론회 운영 세부 기획 및 논의
10		학교분과	1차	10.18(금) 13:30~15:30	공론화 추진단 운영계획 및 주요이슈
11			2차	10.31(목) 15:00~17:00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정책 환경
12			3차	11.15.(금) 14:00~17:00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현장과 생태계
13			4차	11.23(토) 10:00~12:00	학교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14			5차	12.9(월) 10:00~12:00	분과 이슈리포트 초안 작성 및 검토
15			6차	1.2(목) 14:00~16:00	학교문화예술교육 이슈리포트 수정안 검토, 분과행사 운영방향 기획 등
16			7차	2.11(화) 10:00~13:00	학교문화예술교육 이슈리포트 수정안 최종 검토 및 논의
17		사회분과	1차	10.21(월) 18:00~20:00	공론화 추진단 운영계획 및 주요이슈
18			2차	11.4(월) 12:00~17:00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및 이슈 리뷰
19			3차	11.20(수) 14:00~17:00	사회분과 주요이슈 제시 및 검토
20			4차	12.20(금) 14:00~17:00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체성 논의
21			5차	12.26(목) 14:00~17:30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체성 및 주요의제 논의
22			6차	1.6(월) 17:00~9:00	사회문화예술교육 개념 및 정체성, 주요 의제 관련 논의
23		기반분과	1차	10.21(월) 19:00~21:00	공론화 추진단 운영계획 및 주요이슈
24			2차	11.11(월) 17:00~20:00	15년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추진현황 및 이슈 리뷰
25			3차	11.18(수) 18:00~21:00	기반분과 목표 및 의제 재점검, 전문인력 양성 이슈

연번	구분	분과	회차	일시	안건
26			4차	12.9(월) 18:00~21:00	문화예술교육 인적기반 자문회의, 인적/R&D 기반 주요 이슈
27			5차	12.16(월) 18:00~21:00	문화예술교육 인적 및 제도/R&D 기반 주요 이슈
28			6차	1.3(금) 17:00~19:00	문화예술교육 인적/제도/R&D 기반 관련 주요 이슈, 분과별 행사 운영방향 기획 등
29		융합(창의) 분과	1차	10.18(금) 10:00~12:00	공론화 추진단 운영계획 및 주요이슈
30			2차	10.30(수) 10:00~12:00	4차 산업혁명 관련 추진 사업 현황 리뷰, 전문가 자문
31			3차	11.6(수) 13:00~15:00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젝트 사례 공유(1)
32			4차	11.27(수) 13:00~15:00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젝트 사례 공유(2)
33			5차	12.11(수) 10:30~12:30	창의·융합분과 주요 이슈 논의
34			6차	12.26(목) 10:00~12:30	분과 이슈리포트 초안 검토 및 논의
35			7차	1.9(목) 10:00~12:00	창의/융합문화예술교육 이슈리포트 및 프로그램(안), 분과별 토론회 운영 등 논의
36			8차	2.7(금) 10:00~12:00	창의/융합분과 이슈리포트 최종 점검 등
37	**워크숍**	전체	-	11.29(금) 13:30~18:00 연세빌딩 대회의실	분과별 주요의제 및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논의
38	**분과 공론화 (원탁회의)**	총괄 분과	-	1.15(수) 14:00~17:30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주요의제 논의
39		학교 분과	-	1.14(화) 14:00~17:30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다각화 방안 논의
40		사회 분과	수도권	1.16(목) 14:00~17:00	사회문화예술교육 주요 의제 및 지원구조 개편방안 관련 논의
41			충청권	1.17(금) 14:00~17:00	
42			전라권	1.21(월) 14:00~17:00	
43			경상권	1.21(화) 14:00~17:00	
44		기반 분과	-	1.22(수) 14:00~17:30	지역분권에 따른 향후 문화예술교육 인적/R&D 기반 정책 방향 논의
45		융합 분과	-	1.21(화) 14:00~17:00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46	**종합 토론회**	총괄 분과	-	5. 29.(금) 13:30~15:00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추진단 분과별 이슈 논의 등

※ 본 보고서는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결과보고서
–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공론화 이슈

발 행 인 이규석
발 행 일 2020년 10월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록번호 KACES-2090-R004

홈페이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문의 02-6209-5900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